

2013년 G20 정상회의를 위한 논의 현황 및 전망

윤덕룡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차 례 ●●●

1. 2013년 G20 정상회의 개요
2.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사항 및 특징
3. 2013년 G20 정상회의의 전망과 과제
4.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

주요 내용 ●●●

- ▶ 2013년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8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성장' 을 주요 화두로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 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존의 어젠다를 다룰 예정이며, 러시아는 '고용창출' 과 '반부패' 를 추가 의제로 포함시켰음.
- ▶ 지난 4월 개최된 재무장관회의는 여러 부문에서 제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G20이 글로벌 경제포럼으로서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함.
- ▶ 회원국간 이해가 충돌하는 환율문제나 리밸런싱 문제, 일본의 양적완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호한 입장이어서 G20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 G20 내에 G7과 브릭스(BRICS)가 개별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어서 G20의 역할에 제약이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G20의 역할이 특정 이슈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G7 재무장관들은 G20 재무장관회의 전에 가진 독자적인 모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여 G20의 역할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고용 및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 잠재적 갈등 이슈로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와 그 영향, 중국과 유럽 간 불거지고 있는 보호무역적 조치에 관련한 분쟁 등이 예상됨.
- ▶ 한국이 G20 내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국제협력망 구축, 지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연구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1. 2013년 G20 정상회의 개요

- 2013년도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외에 6개 초청국(스페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세네갈, 싱가포르)¹⁾과 7개 주요 국제기구(UN, 세계은행, IMF, FSB, OECD, WTO, ILO)의 수장들이 참석하게 됨.

표 1. 러시아 G20 참여국

분 류		국 가
회원국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 오세아니아	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초청국		스페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세네갈, 싱가포르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IMF, FSB, OECD, WTO, ILO

자료: 필자 정리.

-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균형성장과 고용창출'을 키워드로, 3대 기본방향(priorities)과 8대 의제를 설정하였음.
 - 기본방향은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으로, 기본방향 설정은 역대 G20 중 처음 시도되었음.
 - 러시아는 기존의 G20 의제 외에 고용창출과 반부패²⁾를 별도의 의제로 부각시키고, 투자재원 조성, 에너지 인프라,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Global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등의 이슈를 추가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확산 방지 및 선진국 재정건전화 외에 지난 G20에서 합의한 각국의 거시정책에 대한 이행평가가 강화될 계획임.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제1~3차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경제정책 공조를, 제4~6차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유로존 재정위기가 최대 현안이었던 제7차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타결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함.

1) 스페인은 영구초청국, 브루나이는 2013년 아세안 의장국,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대표, 에티오피아는 2013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세네갈은 2013년 아프리카신개발협력계획(NEPAD) 의장국, 싱가포르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와 GGG(Global Governance Group) 의장국의 자격으로 초청됨. 초청국에 대한 기준은 지역 대표성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스페인 외에는 주요 지역기구 대표 중 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함.

2) 역대 G20에서 고용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공조 의제에서, 반부패는 기타 의제에서 논의된 이슈였음.

표 2. 제8차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예정)

기본방향	주요 의제	세부 내용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Framework)	국제경제 동향 및 G20 프레임워크 시행	- 국가별 중장기 공공채무 목표치 수정 및 목표달성전략 수립 - 거시경제분석용 지표의 수적 확대를 통한 이행평가절차(Accountability Assessment Process) 개선 - 재정·통화·환율·구조 정책 부문의 G20 국가간 지속적 불균형 분석
	고용 창출	투자재원 조성	- 공공정책, 민·관 협력(PPP), 그리고 장기투자, 주식·채권시장, FDI 등의 비전통적 재원 분석
	포용적 개발 (Development for all)		- 견실한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 구조적 정책을 통한 혁신 장려 및 중소기업 지원 -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금융규제 강화		- 유사은행 규제 정책 권고 -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 시스템 도입 결과 분석
	다자무역체제 강화		- WTO·OECD·UNCTAD의 제9차 G20 무역·투자 정책 보고서 검토 - 글로벌 가치사슬(GVC) 보고서 발간 및 관련 통계 논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 에너지·원자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력 강화 -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견실한 규제 - 해양환경보호 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	국제금융체제 개혁		- IMF 쿼터공식 검토 및 쿼터·지배구조 개혁 - 글로벌 유동성 지표 개발 진전 - 지역금융안전망(RFA)의 확충 및 IMF와의 긴밀한 공조 확립
	반부패		- 2013~14년 G20 반부패 액션플랜 이행 개시 - 재정투명성 제고 및 공무원 재정공시(disclosure)

자료: 필자 정리.

■ 러시아는 9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셰르파 회의³⁾ 6회, 재무장관 회의 4회, 실무그룹 회의 등을 준비함.

- 러시아는 지난 로스카보스 G20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외무장관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개발 분야 평가 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핵심 소그룹 및 인적자원, 인프라, 녹색성장 분야 공동조정 국으로 참여함.

■ G20은 비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존 회의 이외에 전문가 대표회의인 Think-20, 시민사회대표회의인 Civil-20, 민간경제계 대표회의 B20, 청년대표자회의인 Y20, 노동계대표회의인 L20 등의 아웃리치 활동을 병행함.

- B20은 G20 정책협의 과정에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21개 글로벌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올해 러시아 G20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나 사실상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시도된 바 있음.

3) 셰르파(Sherpa)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사전교섭대표단으로, 각국은 대통령실 경제팀원을 셰르파로 파견.

표 3. 러시아 의장국 임기 중 G20 공식회의 일정

일시	회의	장소
2012.12.11~12	세르파 회의	모스크바
2012.12.11	Think 20	모스크바
2012.12.12	Business 20, Civil 20	모스크바
2012.12.13	러시아 의장 G20 기본방향 회의	모스크바
2013.2.15~16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모스크바
2013.3.8~9	세르파 회의	모스크바
2013.4.18~19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워싱턴
2013.5.18~19	세르파 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6.18~20	Youth 20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6.19~20	Business 20, Labor 20, Civil 20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7.19~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모스크바
2013.7.25~26	세르파 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9.2~5	세르파 회의, 재무차관 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9.5~6	정상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2013.10.10~11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워싱턴
2013.11.7~8	세르파 회의	모스크바

자료: 필자 정리.

2.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사항 및 특징

가. G20 정상회의 관련 주요 논의과정과 내용

- G20 정상회의 의제들은 경제·금융과 관련된 이슈들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되며, 그 외의 이슈들은 세르파 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됨.
 -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은 필요에 따라 실무그룹(Working Group), 전문가그룹(Experts Group) 등을 구성하여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조율하여 재무차관회의나 세르파 회의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며, 이번 러시아 G20 회의 준비과정에서는 실무그룹회의와 전문가회의를 공식적으로 세르파트랙과 재무트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는 정상회의 이슈 외에도 필요시 세계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2월, 4월, 7월, 10월 4회에 걸쳐 개최됨.
- 2013년도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재무트랙에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국제금융체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세부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중임.
 - 실무그룹에는 G20 회원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와 여러 국제금융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레임워크 실무그룹은 지난 1월 14~15일과 4월 10~11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로스카보스 공약 이행 진전사항

평가,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이행평가 과정 개선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4월 회의에서는 구조개혁 공약 이행 및 G20 국가재정(Fiscal) 프레임워크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정상회의 2달 전인 7월 3~4일에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2월 13일 열린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IMF 지배구조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공공채무관리, 지역 금융안전망 발전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IMF의 2010 쿼터·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10월 초에 후속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세르파 회의는 정상들을 대신하여 합의문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조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2013년도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세르파 회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5월, 9월 4회에 걸쳐 개최됨.
- 현재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는 개발실무그룹, 에너지 지속가능성 실무그룹 등 두 개의 실무그룹과 고용(employment) 태스크포스 하나가 운영되고 있음.
- 개발실무그룹 회의는 2월 26~27일과 5월 15~17일에 열렸는데, 개발 관련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자가평가(self-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실무그룹의 차후 업무방향을 제시할 미래개발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7월 초와 10월 말에 후속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에너지 지속가능성 실무그룹 회의는 2월 19~20일에 개최되었으며, 에너지·원자재 시장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향상, 에너지 효율화·지속가능발전·포용적 녹색성장 촉진, 견실한 에너지 인프라 규제책, 글로벌 해양 환경보호의 4대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7월 초 후속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2월 21~22일에 열린 고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고용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및 G20 공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6월, 7월, 10월에 후속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주요 결과

■ 4월 18~19일 열린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회의에서 다뤄진 의제들과 함께 세계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이 논의됨.

- 세션별 의제는 ① 세계경제 상황 및 거시정책공조, ② 국제금융체제, ③ 장기투자자원 조성, ④ 금융규제, ⑤ 금융소외계층 포용으로 구성됨.

■ 정상회의 의제 개요에서는 다섯 가지 의제 외에 고용창출, 포용적 개발, 다자무역체계 강화,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반부패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짐(표 2 참고).

표 4. 러시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 정리

의제	합의내용	
	2월 모스크바 회의	4월 워싱턴 회의
거시 경제 정책 공조 체계	선진국들은 올 9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재정지속성 증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함.	동일.
	시장결정적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가속화 및 경쟁적 목적 통화·환율정책 자제 의지를 재확인함.	동일. 일본의 최근 경제정책을 디플레 제동 및 내수증진 용으로 평가함. 아울러 한국의 거시경제정책도 긍정적으로 언급함.
	국내목적 경제정책의 부정적 대외 효과(spillovers) 감시 및 최소화를 다짐함.	양적완화 장기화가 가져올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기(mindful of)로 함.
국제 금융 체제	2010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 체결을 촉구함.	동일.
	해당내용 언급 없음.	공공채무 관리 및 재정지속성 확보 중기전략 수립에 있어 여러 국제경제기구의 적극적 자문 역할을 장려함.
	지역금융안전망(RFAs) 간의 대화 증진 및 RFAs와 IMF 간 협력체계 강화 노력을 다짐함.	동일. 각 기관의 독립성 유지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언급함.
	BIS에 글로벌 유동성지표 개발에 대한 조사내용 배포 및 IMF에 글로벌 유동성 문제에 대한 감시방안 모색을 요청함.	해당내용 언급 없음.
장기 투자 재원 조성	투자재원조성 스터디 그룹을 신설함. 세계은행, OECD, IMF, FSB, UN 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임.	스터디 그룹에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도입 및 여러 국제기구와 참여국가로부터 얻는 정보를 활용하기로 함.
	장기투자재원 조성에 있어 지역통화채권시장(LCBMs), 국내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증대 필요성을 언급함. 특히 LCBMs와 관련해 올해 7월까지 G20 액션플랜 실행 완료에 대한 기대를 밝힘.	해당내용 언급 없음.
	다자개발은행(MDBs)에 대출역량 최적화 방식(modalities) 고려 및 기타 투자재원 동원에 있어 촉매역할 강화를 요청함.	해당내용 언급 없음.
금융 규제	바젤 III 개혁안 미도입 국가에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함.	G20 회원국간 바젤 III 의거 규제조치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함.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동의안 실행을 촉구하고, FSB의 조율자 역할을 언급함. 개혁안 실행에 있어, 국가간의 정책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3월 내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를 밝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안의 실행 완료를 다짐하며, 국가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강조함.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촉구함. 글로벌 LEI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함.
	조세회피 단속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강화 및 자동화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함.	동일. 각국의 정보교환 및 감시의 효과성에 대한 평점을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함. 14개 비협조국에 법률체계 마련을 촉구함.
	대형금융기관(SIFIs) 정리체계 확고화 및 유사은행 규제 강화를 강조함. IASB와 FASB 간 회계기준 통합화를 촉구함. FSB의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노력을 환영함. 벤치마크 금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함.	동일.
금융 포용	G20 금융포용 동료학습 프로그램 및 포괄적 금융포용 지원 체계 설립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금융포용 지원체계 설립을 환영함.

자료: 필자 정리.

1) 세계경제 상황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공조체계(Framework)

■ 본 의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촉진’ 이 주 논의대상으로, 지속적 균형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중요성과 더불어 각국의 재정건전성 및 금융시장불안 등의 문제가 화두로 부각됨.

- 일본이 최근 내수증진 및 디플레이션 제동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과 한국의 적극적 경제부양책 발표를 경기활성화 정책의 두 사례로 지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선진국들은 2012년 로스카보스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정책공약에 의거하여 올 9월 G20 정상회의 개막 전까지 재정지속성 증기전략 수립에 합의하였음.

■ 시장결정적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가속화 및 경쟁적 목적의 통화·환율정책 자제 의지를 재확인함.

- 통화정책은 경쟁적 평가절하가 아닌 국내물가 안정화 및 경기회복 촉진의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양적완화 등 각국의 국내정책이 여타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염두에 둘 것이다(will be mindful of)” 라는 표현을 사용,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의 “감시하고 최소화하기로 다짐한다(commit to monitor and minimize)” 에 비해 강조점이 약화됨.

■ 추가 정상회의 의제: 경제정책 심층분석 및 G20 회원국간 협력강화를 위해 프레임워크 실무그룹(FWG) 활동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임.

- 국가별 중장기 공공채무 목표치 수정 및 달성 전략 수립, 반영지표의 수적확장을 통한 이행평가절차 개선 및 거시경제분석의 종합화·정교화, 재정·통화·환율·구조적 정책상 G20 회원국간 지속적 불균형에 대한 분석 등 3대 주제를 다루게 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리스크 경감책을 포괄하는 G20 샤프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올해 말까지 공표할 예정임.

2) 국제금융체제

■ 오늘날의 국가별 경제적 영향력을 잘 반영하고 IMF 최빈 회원국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IMF 회원국과의 협조하에 2014년 1월까지 15차 쿼터 종합검토를 완료하고 신규 쿼터 공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출자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6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IMF 위기 대비용 기여금을 지분확대용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임.

※ 2010년 IMF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 자본금 100% 증액 △ 쿼터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6.2%, 신흥개도국으로 6% 이전 △ 2013년 1월까지 쿼터 공식 재검토 및 2014년 1월까지 쿼터 종합검토 완료 등임.

-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부의제인 공공채무 관리 및 재정지속성 확보 중기전략 수립과 관련해 IMF,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 자문역할을 장려함.
 - 세계은행과 IMF가 발표한 “공공채무관리지침” 검토 및 이행 단계에서 특히 공채관리 · 통화 · 재정 정책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두 기구가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7월 후속회의와 9월 정상 회의에 관련 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주요국의 공채 발행 · 관리 · 상환 관행에 대한 OECD의 검토 작업 및 IMF의 시장접근국가(market-access countries) 공공채무 지속성 분석틀 강화노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함.
- 올해 우리나라가 새로 제안한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RFAs) 의제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화 도모를 위해 RFA 간의 의견교환 촉진 및 IMF와의 공조 · 상호보완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룸.
 - 7월 후속회의에서 RFA와 IMF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9월 정상회의까지 정책 권고사항에 대해 평가하기로 함.
- 추가 정상회의 의제: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주안점으로서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및 정당성, 다자적 기준 · 지침 · 권고사항들의 도입 및 효율성, 글로벌 유동성 · 자본흐름 · 준비통화 · 환율 등의 문제를 제시함.
 -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올해 말까지 IMF 쿼터개혁 완료 및 검토, 글로벌 유동성 지표 개발 진척, 지역통화 채권시장(LCBMs)의 발전을 위한 G20 액션플랜 이행 완료, RFA의 지속적 발전 및 IMF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 등의 결과를 달성하고자 함.

3) 장기투자자원 조성

-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투자자원 조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월 신설된 G20 스터디그룹을 통해 투자환경 견실화 및 장기투자자원 조성 촉진에 관한 여러 국제경제 기구들과 참여국들의 경험을 적극 참고하기로 함.
 - 스터디그룹은 작업계획 및 정책권고 사항을 올해 안에(later this year) 제출할 예정임.
- 추가 정상회의 의제: 특히 선진국의 투자위축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 현재 세계경제 환경에서 장기투자 신규재원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함.
 - 공공정책 및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nerships) 제고, 중소기업과 신규업체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은행의 자본화 요건 충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실물경제 자본 투입 촉진을 위한 은행부문 규제 개혁 권고안 마련 등의 성과를 9월 정상회의에 제시하고자 함.

4) 금융규제

- 바젤 III 협약에 의거한 규제조치 마련·시행에 있어 G20 회원국 간의 정책적 일관성 확립 및 기존에 합의된 여러 규제사항 이행의 지속적인 진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개혁의 법적·제도적 틀을 완성하기로 다짐하고, 국가간 규제내용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권고안을 7월 후속회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주요 규제담당기관에 요청함.
- 관련기관의 리스크 및 금융안정성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촉구함.
- 금융기관 정리체계 강화 및 질서화를 강조하고, 또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 종식을 위한 FSB의 진척상황 보고서가 9월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임을 언급함.
- 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바젤 III를 2016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유럽,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을 1년간 유예하여 내년에 수용할 예정임.

표 5. Basel III 도입 현황(2013년 3월 말 기준)

규제 이행 상황	국 가
최종안 시행	일본, 중국, 홍콩, 인도,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최종안 발표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최종안 일부 시행중)
초안 발표	미국, EU(회원국 이행상황 균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초안 미발표	없음

자료: BIS(2013), Progress Report on Basel Implementation.

- 탈세 및 조세피난처 의제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가 미비한 국가들에 즉각적인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국가간 조세목적 정보공유의 자동화 필요성을 역설함.
- 7월 후속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전과 세원잠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포괄적 정책제안을 할 예정임.
- 추가 정상회의 의제: 금융규제 개혁·강화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활동 지원 및 조직의 제도화를 지지하고, 대형금융기관(SIFIs)의 감시 강화, 유사은행 규제 보강,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 시스템 개발,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의 추가적 주제를 다룰 예정임.

5) 금융소외계층 포용

- 지난 4월 세계은행이 발족한 금융포용 지원체계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중소기업의 국제적 자금조달환경에 상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7월 후속회의에 제출하도록 금융포용 파트너십(GPFI)에 요청하였음.

6) 기타 의제

- 이번에 추가의제로 채택된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G20은 고용 태스크포스(ETF)를 통해 건전한 통화·재정 정책,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 노동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임.
 - ETF는 G20 노동장관 선언문, 노동활성화를 위한 모범정책 데이터베이스 및 정책권고안, 청년 고용 관련 G20 공약 진전 보고서 완성 등의 결과를 올해 말까지 달성할 예정임.
- 포용적 발전 의제와 관련하여 개발실무그룹(DWG)은 식량안보,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여성·이주민·청년 등의 금융접근성 증진 및 포용, 이전 G20 공약에 대한 책임이행 메커니즘 개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9월 정상회의에 개발 액션플랜 초안 및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 무역의제는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보고서 발간 및 통계 작업을 논의할 예정임.
- 에너지 지속가능성 의제에서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 주도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원칙을 마련하고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Global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유가공시기관(PRA)의 기능을 개선·감독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로 함.⁴⁾
- 러시아가 별도 의제로 부각시킨 반부패와 관련하여 2013~14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패공무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임.

3. G20 정상회의의 전망과 과제

- G20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전 세계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규칙을 단계적으로 제정·확충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음.
-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논의들 가운데 세부적으로 다양한 진전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새로운 어젠다로 제기된 고용문제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협력기준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4) 유가공시기관(PRA)은 원유의 현물,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발표하는 기관으로 대다수가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영국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원리로 운영되는 PRA 또한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설부른 개입이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대론자도 있음.

- 정식의제들은 이미 각 실무그룹 등에서 논의의 틀이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을 빚기보다는 지연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의제로 예정되지 않은 현안 가운데 일본 아베노믹스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문제, 중국과 유럽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적 조치 확대 가능성 등이 러시아 정상회의에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이슈로 예상됨.
- G20 정상회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간 협의의 장으로서 기여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2013년도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동 포럼이 가진 주요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들 수 있음.
 - 첫째, 환율, 글로벌 재균형화, 양적완화 등 G20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하고 있어 포럼 출범 시부터 지적되어온 G20의 유용성 및 효율성 제고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 둘째, G20 내에서 여전히 G7이 개별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합의를 하고 그 결론을 G20에서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브릭스(BRICS) 국가들도 개별 회동을 가져 G20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독립된 포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함.
 - 셋째, 아직 논의되고 있는 기존 의제들이 많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거나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의제가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장국이 계속하여 추가의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의제의 종류와 수가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G20 회의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

4.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

- G20에서 한국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방향 설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G7에 속하지도 않고 신흥국들이 중심인 브릭스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기간 의 장단에 참가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G20 내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G20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자리만 채운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경제협력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한국은 G20 회원국으로서 특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 설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한국이 G20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려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간의 국제협력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급적 중첩적 구도로 설치하여 필요시 일정수준의 국제공조가 항상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EU 국가들의 경우 EU가 G20 내에 하나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지역협력 차원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G7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공조를 위한 협력망을 중첩되게 운영하여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도 가깝게는 한·중·일 3국간 협력, 아시아권 G20 회원국 7개국간 지역협력, 혹은 G20 내 중견국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공조의 틀을 중복되게 구성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주요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하는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임.
 - 지적 리더십의 발휘는 한국의 이해가 연계된 주요 어젠다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요 어젠다에 대한 포럼 및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슈를 제기하고 국제화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이 G20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영향이 제한된 중견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고 G20 회원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G20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G20 내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설 연구기관의 설립,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등 국내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부록. 제1~7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주요 의제
미국 (워싱턴) 2008. 11	16개 항 및 47개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 국제 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 (런던) 2009. 4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미국 (피츠버그) 2009. 9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 출구전략 공조 확인 -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방안 마련 협의
캐나다 (토론토) 2010. 6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와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 금융부문 개혁 및 규제 강화 - 국제 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 저개발국 지원방안 마련 협의 *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
한국 (서울) 2010. 11	20개 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서울 액션플랜) -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 금융부문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바젤 III, SIFIs 등)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협력 강화
프랑스 (칸) 2011. 11	25개 항의 합의문, 95개 항의 선언문, 액션플랜 발표 -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 대형금융기관(SIFIs) 종합규제체계 마련 - 금융안전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 결과 승인
멕시코 (로스카보스) 2012. 6	85개 항의 정상선언문, 액션플랜 부속서 합의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조기 설립 및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결정 지지 - 경상흑자국의 내수증진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확대를 통한 리밸런싱 촉진 -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 및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약속 재확인 -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조치 연장 -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활용을 위한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 체계 구축안 승인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 노력 지지 - 원자재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의지 확인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약속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선 지지